

# 러시아 정세변화와 한반도 정책

조 한 범\*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한국의 고려사항 |
| II. 러시아 정세변화           | V. 맺음말       |
| III.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              |

## I. 머리말

러시아의 시장경제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구도의 전반적인 변화상황은 급진개혁세력이 약화되고 보수 민족주의, 그리고 좌익세력의 강화로 평가될 수 있다. 친 서방정책을 반대하는 좌익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의 부각은 러시아의 대외정책구사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옐친의 친 서방정책 구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시에 옐친 등장 이후 러시아의 대서양의 교안보능력이 축소되고 아태지역에서도 입지가 약화된 현실은 개혁초기 러시아의 유화적 대외정책 기조를 수정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러시아 국내정치적 보수화와 국제정치구도에서의 입지약화는 러시아대외정책은 물론 한

\* 민족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국과의 관계개선을 중심 축으로 하던 한반도 정책에도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소연방의 해체 등 구 사회주의권의 전반적인 붕괴는 미소대립관계를 핵으로 하는 냉전체제를 해체시켰으며, 새로운 국제질서재편과정을 자극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 현상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된 반면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헤게모니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NATO의 동유럽확대는 상징적 사례로서 러시아는 과거 군사적 동맹 관계에 있던 국가들이 NATO에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과거와 다른 자신들의 현실을 기초로 한 새로운 현실적 대외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아태지역에 대한 관심의 증대이다.

러시아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 입지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 설정을 통해 관계개선을 꾀하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모습은 이 과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확대되어가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최근 조정국면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통일이 한민족 내부의 문제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주변국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국제문제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러시아의 자세변화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러시아의 국내 정세변화가 대 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한국의 대러시아 관계정립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러시아 정세변화

러시아 정세변화의 기초는 시장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이다. 러시아의 경제체제전환과정은 러시아 정치구도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초기에 실시된 러시아의 급진적 개혁조치들은 러시아 사회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했다. 급진적 가격자유화와 초 인플레이션,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경기후퇴, 복지체제의 전반적 축소 등은 러시아인들의 생활을 악화시켰고, 주변부화를 촉진시켰다.

러시아는 급진적 체제개혁을 시도한 1992년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해체하고 시장화를 진전시켰으나,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후퇴 등 경제개혁의 부정적 측면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 러시아의 GDP가 1989년에서 1996년 중반까지 약 48%가 하락했다는 점이 러시아 경제개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동기간 러시아인들은 초 인플레이션, 실업과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수준의 악화를 감수해야 했다. 사유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지만 사유화가 의도했던 결과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생산부문인 농업과 공업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운송과 커뮤니케이션, 국내거래, 기타 서비스부문의 비율은 급증하여 기형적 경제구조를 형성했다. 시장화를 위한 제도화가 미미한 동시에 경제분야에서의 부패와 범죄가 급증하였으며, 이는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sup>1)</sup> 러시아는 최근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조짐들을 보이고 있으나, 동시에 국제금융을 얻기 위해 IMF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러시아 개혁의 부정적인 결과는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구 사회주의 특권층 출신들인 소수의 노멘클라투라와 지하경제 그리고 범죄적인 요소들에게 유산자화할 기회를 부여했지만 대다수의 러시아인들에게는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했다. 충격요법식의 개혁과정에서 상당수 러시아인들에게 강요된 것은 실업과 궁핍화, 그리고 하층으로의 이동이었다. 이와 같은 경제개혁의 부정적 측면들은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경제개혁과 이를 추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정서를 가지게 만드는 동시에 개혁에 비판적인 세력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경제개혁의 부정적인 측면들은 1993년과 1995년의 총선에 반영되어 개혁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감소하는 반면 반 개혁 보수세력이 강화되는 정치

1) 조한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41.

현실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러시아에는 극우에서 극좌에 이르는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개혁지지세력과 반대세력 그리고 이들 사이의 중도세력 등 다양한 세력들이 러시아의 정치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현 대통령 엘친진영과 공산당의 유가노프, 군부출신으로 강력한 러시아주의를 표방하는 레베드, 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야블린스키, 극우 민족주의자인 지리노프스키 등은 러시아 정치구도의 상징적 인물들이다. 급진개혁세력의 약화와 보수 민족주의, 그리고 좌익세력의 강화로 평가되는 러시아 정치구도는 엘친대통령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개혁의 충격이 가장 컸던 시기인 1993년의 총선에서 친 개혁그룹인 「러시아의 선택」(15.51%), 「야블로코」(7.86%) 등은 약세를 보인 반면, 개혁비관세력으로 분류되는 보수그룹인 지리노프스키의 「러시아자유민주당」(22.92%), 「러시아 공산당」(12.40%) 그리고 「농업당」(7.99%)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sup>2)</sup> 개혁이후 최초로 실시된 93년의 총선은 급진적인 개혁의 부정적 파급효과의 가시화에 따른 반작용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특히 합리적인 정책보다는 과격한 민족주의적 선동에 능했던 지리노프스키의 「러시아 자유민주당」이 최다득표를 한 것과 공산당의 선전은 이를 뒷받침한다.<sup>3)</sup>

1995년 선거에서도 엘친정부의 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던 세력들이 승리했으며, 공산당은 최다득표를 했다. 이 선거에서 비례의석을

2)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8 Декабря 1993.

3) 소련체제의 붕괴이후 최초의 총선이었던 93년 선거결과에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시각들이 존재한다. 첫번째 해석은 일련의 개혁과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는 전통적인 러시아 정치문화의 강화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두번째 해석은 93년의 선거는 그동안 변화해온 정치문화를 지닌 유권자들의 투표경향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첫번째의 설명이 러시아의 문화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두번째의 입장은 러시아국민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점차 '시장'지향적이고 자유주의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번째의 설명은 93년의 선거가 러시아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학습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았을 때 시장과 민주주의적 개혁에 대한 경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문화의 재구성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의 결과가 개선된다면 민주주의와 시장에 대한 지지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A. Whitefield and G. Evans, "The Russian election of 1993: Public opinion and the transition experience", *Post-Soviet Affairs*, Vol 10. No 1. 1994. pp. 39-41.

배정받을 수 있는 하한선인 5% 이상의 득표를 얻은 정당은 「공산당」(22.30%), 「러시아 자유민주당」(11.18%), 「우리집 러시아」(10.13%), 「야블로코」(6.89%) 등 4개 정당이었다.<sup>4)</sup> 특기할 만한 사실은 「러시아 자유민주당」과 「러시아 공산당」이 서로 자리바꿈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러시아 자유민주당」이 합리적인 정책개발에 실패했고 과격한 선동에 계속해서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비례의석의 배분을 통해서 157석(34.9%)을 획득한 「러시아공산당」은 결과적으로 하원의 최대다수당으로 등장했다. 「러시아공산당」은 이와 같은 유리한 입장을 바탕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과정에서 좌파세력을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좌파세력은 하원의 과반수를 점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회에서 「러시아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는 옐친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지배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96년 대선 옐친은 재선에 성공했다. 대선의 1차투표에서 옐친과 쥘가노프는 각각 35.2%와 32.3%를 획득함으로써 치열한 경합을 보였다. 3위인 레베드는 14.52%, 야블린스키<sup>5)</sup>는 7.34%를 획득했으며, 지리노프스키는 5.70%를 획득하여 93년 이후 전체적인 하향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sup>6)</sup> 결선투표과정에서 레베드를 합류시킨 옐친은 54.39%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재선되었고, 쥘가노프는 40.73%를 획득했다. 옐친의 재선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점은 쥘가노프 지지 투표자들이 40%에 달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옐친의 대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급진개혁세력의 약화와 좌익세력의 입지강화, 보수, 민족주의세력의 부각으로 특징 지워지

4)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6 Января 1996.

5) 야블린스키는 옐친정부의 개혁에 비판적이지만 쥘가노프나 레베드와는 달리 러시아의 시장경제개혁의 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야블린스키는 서방과 러시아의 자유시장론자들에게 합리적인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 상당수의 러시아인들이 현 러시아의 위기가 급진적 경제개혁에 기인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야블린스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93년과 95년의 총선 그리고 대선 1차투표에서 야블린스키 진영이 7%내외의 고정적인 득표율을 보였다는 점은 야블린스키진영의 현실을 나타내주고 있다.

6)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2 Июня 1996.

는 러시아 정치상황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공산당 및 민족주의와 보수세력의 입지강화는 엘친의 정국주도권 장악과 개혁추진에 상당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러시아의 새로운 정치질서의 형성과정에서 엘친은 자신과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다당제 정치체제의 형성을 원했다. 따라서 엘친은 소속정당을 가지지 않았으며, 자신을 지지하는 중도적 성격의 정당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의 형성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부각은 반 엘친 정치세력이 강화되는 사회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또한 구 체제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혼돈은 러시아인들이 중도 온건세력보다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엘리트들에게 지지를 보내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향후 러시아 개혁과정의 전개에 따라 현 정치세력들의 세력판도도 상응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세력과 좌파의 부각으로 특징 지워지는 현 러시아의 정치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엘친 이후의 권력재편과정에서 좌파세력을 대표하는 쥘가노프와 민족주의성향의 레베드<sup>7)</sup>는 여전히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인물로 남을 것이다. 러시아 정치의 제도화가 취약한 상태에서 엘친의 건강문제라는 돌발변수의 작용여부에 따라서 정치구도변화가 매우 급격한 양상을 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러시아 국내정세변화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의 한 요인이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러시아사회의 급격한 구조적 변동을 초래했고, 이는 현 러시아정치구도의 기본적 지형을 제공하고 있다. 좌익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의 부각으로 특징 지워지는 러시아 국내정

7) 최근 레베드는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주지사에 당선됨으로써 정치적 입지기반을 강화시켰다. 각종 여론조사결과는 러시아인들은 레베드를 '강력한 지도력, 현명함, 청렴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А 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1998. No. 21. Май. 개혁으로 인한 경제의 위기적인 국면과 사회질서의 와해에 염증을 느낀 러시아인들에게 확고한 지도력에 기반한 강력한 러시아를 주창하고 있는 레베드의 주장들은 상당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치구도의 재편과정은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감소라는 현실과 결부되어 엘친의 친 서방 대외정책의 구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3.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소련의 해체에 따라 러시아는 냉전적인 대외정책을 수정하였고, 실리위주의 유화적인 대외정책으로 전환했다. 러시아는 체제전환과정에서 서방의 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은 소련과 같은 적대적인 강국의 출현을 막고 러시아를 세계시장체계에 효과적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방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의 형성이 가능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친 서방적인 외교노선은 경제개혁의 지체와 국내정치적 보수화에 따라서 최근 변화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개혁의 부정적인 현상이 증가하고 대외적인 영향력 감소에서 비롯되는 강력한 러시아주의에 대한 대중정서가 러시아에 팽배하고 있다. 특히 나토의 동유럽 확대정책을 러시아는 국제적인 영향력 상실과 고립의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개혁초기 친 서방적인 정서는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대외정책 기조도 외교적인 독자성과 영향력의 유지 및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상황도 90년대 초와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남한과의 경협이 의도했던 만큼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4자회담에서 소외되는 등 영향력감소가 현저하다고 판단하는 러시아는 대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는 1997년 5월 나토의 동유럽확대안을 수용함으로써 유럽지역의 안보질서재편과정에서 역할이 축소당하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이는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중요시 여겼던 '대서양외교'에서 입지약화를 의미했다. 러시아가 나토의 확대를 용인한 대가로 얻어낸 상설협의체인 '나토 러

시아 위원회'를 통해서 러시아가 유럽안보문제에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또한 동유럽지역에 핵배치를 배제했다는 것도 일정한 성과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들은 나토의 확대에 의해 러시아의 군사적 안전지대의 상실 및 국제적 영향력의 약화라는 손실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또한 발트3국의 나토가입문제 등 향후 나토문제는 지속적으로 러시아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러시아의 좌파세력 등은 나토확대를 용인하는 협정서가 러시아의 '항복문서'라는 정치적 비난을 가했다.<sup>8)</sup> 동시에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약화는 대서방 강경노선의 대중적 정서를 자극했다. 그러나 나토의 확대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수용은 러시아가 국제적인 영향력축소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대서방 유화노선에 대한 재검토를 의미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유럽을 중시했으며, 대서방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다. 러시아의 중심부가 유럽과 접해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유럽지역의 정치, 군사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정학적 요인이외에 서방 선진국들의 원조가 러시아의 개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도 러시아의 유럽우선정책의 원인이었다. 유럽지역의 새로운 안보질서재편과정은 러시아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관심사이며, 동북아에서의 질서변화는 2차적인 의미를 지녔다. 따라서 러시아는 아태 및 동북아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의 협력구도에 관심을 보여왔다.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동북아시아 지역은 유럽지역에 비해서 부차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동북아와 한반도는 유럽지역에 비해서 상대적 중요성이 적은 지역에 해당하며, 러시아의 대외정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는 러시아연방의 외교안보상 주요주제가 첫째, 서방의 동유럽

8) 나토 신규 회원국들에 대한 핵배치배제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는 만족감을 표시했다. 프리마코프 외무부장관은 협상타결후 '러시아와 전세계를 위한 위대한 승리'라고 자축했으며, 엘친도 합의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토 러시아위원회'의 운영이 만장일치가 아닌 consensus(의제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지 않는 합의)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의사결정권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지역에 대한 나토확대에의 대응, 둘째, CIS지역의 효율적 관리, 셋째, 미국과의 효과적인 군비통제 라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sup>9)</sup>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유럽지역에서의 국제적인 입지축소와 아태지역 중요성의 점증,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민감한 역학관계에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이 러시아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사실상 러시아의 아태정책은 커다란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 주요 요인들은 구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매우 복잡한 아태지역의 문제들<sup>10)</sup>과, 러시아의 친 서방주의 우선정책이었다. 그 동안 러시아 국내에서는 코지레프 전 외무부장관이 주도하는 러시아의 친 서방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비난의 요지는 친 서방적인 ‘대서양외교’를 지양하고 ‘유라시아’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11)</sup> 최근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자국에 유리한 안보환경 및 동북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협력추진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의 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다. 미국이 유일 강대국으로서 미일동맹체제를 통해서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9) 연현식, “러시아의 대 동북아 정책”, 『슬라브학보』, 제11권 2호, 1996. pp. 257-263.

10) 아태 및 동북아 정책과 관련은 러시아는 구 소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유산을 물려받았다. 우선 대다수 지역분쟁에 대한 개입이 철회되고 러시아 국익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동북아의 북한, 베트남, 몽골 등 과거 정치, 경제적 유대를 가졌던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동 지역국가들과의 채무지불 연기문제가 악화되었다. 정세 변화에 따라 러시아의 개혁세력이 중국, 북한, 베트남을 ‘아시아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체제’로 간주하는 반면 보수주의세력들은 중국을 잠재적 동반자로 인식함과 아울러, 긍정적 대중국정책의 추진을 촉구했다. 한국의 중요성이 급속히 커졌으며, 중요한 지역동반자 국가로 부상했고, 일본과의 영토분쟁해결 협상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러시아의 모든 정치, 경제세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 전략과 행동방침이 없었다. Valery Zaitsev,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 우선권의 변화,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Korea-Russia cooperation, The 7th IFANS-IMEMO conference, 1997, 10. pp. 1-2.

11)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추구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시도도 초기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러시아는 상당기간 APEC가입에 실패하여 아태지역 지역경제협력과정에서 배제되었으며, 아태지역 정상회담으로부터도 소외되었다. 뿐만 아니라 방콕에서 개최된 제 1차 아시아 유럽회의에서 러시아가 삭제됨으로서 러시아인들은 아태지역 외교역량에 상처를 받았다. 러시아는 KEDO와 4자 회담의 진행과정 등 한반도관련 국제관계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는 시도에 대해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형성을 통해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려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도 일정정도 개선함으로써 동북아 역학관계의 다극화를 시도하는 현실적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군사력 현대화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지배적 영향력확보 과정에서 러시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일치는 중러간의 밀월관계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97년 4월 강쩌민은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옐친 러시아대통령과 중국의 강쩌민 주석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한 나라가 패권정치를 행사해서는 안되며, 국제문제를 독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미국중심의 세계질서재편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의 보조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개선은 97년 11월 옐친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가속화되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그동안 양국간 관계개선의 걸림돌이었던 국경문제를 정리하고, 국제문제와 경제문제에 대한 상호공조를 다짐했다. 특히 그동안 중소분쟁의 원인이었던 우수리강유역과 아무르강의 섬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4,200km에 달하는 동부국경의 경계를 확정했다. 따라서 양국은 91년 5월 조인된 국경협정에 관계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했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다른 국경문제(서부국경문제)도 '이성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미·일·중·러간의 정상회담에 만족하며, 팽창주의나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는 점, 그리고 중·러관계 증진이 제3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상 국제문제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양국의 경제협력은 러시아, 중국, 한국 및 일본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가스관 건설사업에 모아지고 있다. 중국은 향후 경제발전 과정에 막대한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 실정이고, 러시아 측으로서는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중국과 러시아만의 힘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한국과 일본이 전체가스공급량의 절반을 소화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시베리아 가스관 사업은 전체적인 구도가 잡힌 단계에 불

과하다. 그러나 향후 진전상황에 따라서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상실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회복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측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동북아에서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을 동북아의 전략적 동반자로 선택한 것은 장기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아시아 정책의 구사가 실패로 돌아간 러시아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1993년 이후 러시아대외정책의 새로운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동시에 러시아가 '대서양 우선주의'라는 낭만주의적 경향을 벗어나 자기주장을 하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셋째,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형성은 역설적으로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여지를 축소시켰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역할, 핵 및 미사일기술 비확산, 무기통제와 신뢰구축조치, 러시아의 지역경제로의 통합 등의 문제에서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넷째, 중국의 이해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당면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므로 다른 지역국가들과 조정을 모색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다.<sup>12)</sup>

이와 같은 러시아의 대중접근 자세는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은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최근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시모토 총리는 1997년 7월 전향적인 대러외교 3원칙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하시모토총리는 '태평양이란 시점에서 바라본 유라시아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러시아외교 3원칙은 신뢰, 상호이익, 그리고 장기적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변여건이 성숙한 뒤 영토를 반환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북방도서문제의 해결여부에 따라서 정치, 경제분야의 균형외교를 취하겠다

12) Valery Zaitsev,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 우선권의 변화,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Korea-Russia cooperation, The 7th IFANS-IMEMO conference, 1997, 10. pp. 3-4.

는 자세에서 일정정도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일본의 대러시아 외교의 신축성이 확대됨을 의미했다. 또한 러시아는 97년 11월 1, 2일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열린 일본과의 비공식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 보다 진전된 관계를 형성했다. 이 회담에서 일본은 영토문제 해결 없이 평화협정 체결 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2000년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일본의 대 러시아 ‘압박외교’에서 ‘신뢰회복을 통한 화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동시에 일본과 러시아는 러시아의 시장경제개혁을 돕기 위한 하이테크 분야, 무역 투자, 러시아 국내산업, 러시아 경영인 및 공무원의 연수, 에너지와 원자력분야의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경제교류의 확대를 예고하였다. 또한 양국정상간의 직통전화개설과 군사교류 등 안보채널의 형성에도 합의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98년 엘친대통령의 방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이 새로운 단계 즉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축으로 일본과 삼각구도를 형성하여 진행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동북아시아 세력균형이 다극구도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냉전체제의 종식은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한반도’라는 구 소련의 대 한반도 정책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러시아는 그동안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남한과의 급속한 관계개선을 시도해왔으며, 남한을 인정하는 ‘두개의 한반도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북한간 관계의 중요성은 감소되어 왔다. 특히 상대방의 군사적인 위기 시 자동적인 개입조항을 담고 있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의 실질적인 폐기는 러시아와 북한간의 관계의 현실을 나타내 주는 상징적인 사례였다.

러시아는 과거 구 소련시절과 달리 대 한반도정책에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 1945년에서 1980년대 말까지 구 소련의 대한정책은 동서냉전체제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되어왔다. 냉전구도속에서 소련은 북한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이는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서방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대결구도를 형성하던 소련의 현실적인 안보문제에 직결된 것이었다. 그러나 1988년 소련의 서울올림픽 참가와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회담을 가지면서 러시아의 대한정책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러시아의 대한 정책이 탈냉전기의 과도기적 변화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도기적인 정책변화는 1992년 옐친의 서울방문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이행했다.<sup>13)</sup> 이와 같은 관계개선추세는 1994년 김영삼대통령의 모스크바방문에서 극대화되었다. 이 방문에서 양국은 ‘상호 건설적인 동반자관계’에 접어들었음을 천명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지지 등 기타현안에 대한 협조약속과, 특히 구소련과 북한관계를 상징하는 ‘조소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sup>14)</sup>의 제1조를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일정정도 ‘정리’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정책목표를 한반도의 안정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현실적 이해관계의 관철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KEDO참여 무산과 4자회담 진행에 따라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소외감은 증폭되고 있다.<sup>15)</sup> 또한 러시아가 미국이나 한

13) 옐친의 서울 방문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이 북한이 아닌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 둘째, 러시아는 기본관계조약을 북한이 아닌 한국과 우선적으로 체결했다. 셋째, 옐친은 서울에서 구 소련이 북한과 맺은 조약은 폐기와 수정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선언을 했다. 넷째, 옐친 대통령은 더 이상 대북 군사지원은 없을 것이며, 한국과 군사분야에서의 협력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구 소련시기의 대한반도 정책에 비교했을 때 옐친의 언급대로 ‘한러 양국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었다. A Zhebin, Russia and Korean unification, Asian Perspective, Vol. 19, No. 2, 1995. pp. 175-176.

14) 이 조약은 특히 제1조의 상대방 피침시 자동군사개입조항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구 소련과 북한간의 긴밀한 관계를 상징하고 있었다. 이 제1조의 중요성 때문에 흔히 ‘북소동맹조약’으로 불렸으며, 1조의 규정은 ‘자동군사개입조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조약은 5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1991년 갱신 이후 1996년까지 효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변화된 국제관계상 이 조약의 수정을 공언해왔고, 1996년 갱신하지 않음으로서 효력을 상실했다.

15) 러시아는 KEDO와 4자 회담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되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가 자신들에게도 유리하다는 입장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국으로부터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사전협의나 통고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러시아는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의 중심축을 남한으로 이전하는 과정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상실하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는 1990년 국교수립이후 급격하게 개선되어 가는 남한과의 경협강화과정 속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일정정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엘친은 94년 9·9절에 축전을 보내는 한편 파노프 대통령특사를 북한에 파견하였다.<sup>16)</sup> 특히 경수로를 둘러싼 미묘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북한에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자세는 김일성 사후 북한과의 관계를 일정정도 유지함으로써 약화된 대북 영향력을 회복하고 남북한과의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자국의 실익을 확보한다는 입장으로 이어졌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미일의 대북한 접근과정에서 발생할 자국의 외교안보적 이익의 축소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효력을 상실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하는 조약의 추진<sup>17)</sup>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sup>18)</sup> 프리마코프 외무부장관은 97년 7월 한국방문에서 러시아는 남북한

---

일정정도 공조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북한에 대한 경수로 공급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것을 자신들의 기득권 침해로 받아들였다. 또한 한국의 4차회담제외에서 자신들이 빠져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러시아의 소외감은 증폭되었다. Chikahito Harada, *Russia and north-east Asia, Adelphi Paper* 310, 1997. pp. 62-65.

16) 김일성 사후 북한을 처음 공식 방문한 파노프특사는 이인규 북한 외교부부장과와의 회담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간의 정상적인 선린관계의 유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 및 러시아형 경수로채택을 희망하는 엘친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에게 전달했다. 또한 양국은 국회간 교류 등 정치관계를 복원하고, 경협과 교역의 확대,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등 경제교류확대에 합의했다.

17) 북한과 러시아간의 새로운 조약체결과정으로 97년 1월의 평양회담에 이어 6월 모스크바에서 차관급 2차회담을 가졌다. 북한과 러시아간의 새로운 관계를 규정하는 조약은 과거의 형태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신들의 영향력회복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일정정도 관계개선을 위한 외교적 양보의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과 균형적인 외교를 유지할 것이며, 어느 한쪽과의 관계발전이 다른 쪽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되고 있으며, 양국이 상호협력메커니즘을 복구하고 있다’고 함으로서 북·러관계가 최근 몇 년간의 소강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했다.<sup>19)</sup> 97년 9월 레베드의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의 중계자가 될 것’<sup>20)</sup>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남한에 치중해있던 한반도 관계의 균형회복을 의미하며, 따라서 한국에게는 대러시아 교섭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남한을 북한보다 우선시하던 러시아의 초기 한반도 정책은 첫째, 한반도 평화의 유지와 동북아의 안전보장 및 중장기적인 동북아 집단안보체제의 형성, 둘째 남북한에 대한 균형잡힌 관계의 유지로 변화했다. 따라서 러시아의 표현대로 북한에 대해서는 내정불간섭과 주권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 선린관계를 증진시킨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다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sup>21)</sup> 최근 러시아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북한과의 긴밀한 정치군사적인 관계를 일정정도 회복하여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유지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sup>22)</sup>

18) 러시아는 1996년과 1997년에 걸쳐서 북한과 다양한 협정의 체결을 통해서 관계의 개선을 꾀하고 있다. 1996년의 경우 투자장려보호조약등 4건의 조약체결이 있었고, 97년에도 여행협정 등 3건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와 같은 북러간의 접촉증가는 그동안 생각되었던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일정정도 복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 한국일보, 1997. 7. 23.

20) 문화일보, 1997. 9. 23.

21) 강봉구,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1993. 3~1995. 5) :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20권 1호, 1996, pp. 170-171.

22) 이와 같은 러시아의 태도를 나타내주는 단적인 사례는 로디오노프 국방장관의 한반도 전쟁시 개입하겠다는 발언이다. 조선일보, 1997. 4. 16. 이는 군사적인 자동개입조항을 담고있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의 실질적 폐기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러시아의 태도와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4. 한국의 고려사항

러시아가 대서양에서의 열세를 아태지역에서 회복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태지역에 대한 외교적 관심의 증대가 '대서양 우선주의'의 궁극적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럽은 아직도 러시아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의 아태지역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든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으며, 러시아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매우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경제와 안보 두 가지 측면에서 주요 관심사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이 러시아 동부와 북부지역의 천연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자국의 원료 및 에너지 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시장화에 대해서도 한국이 기타 서방의 국가들과 동등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과 러시아의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경제적인 고리는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경제분야에 있어서 남북한과 러시아의 3자협력구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한의 재정, 기술, 북한의 값싼 노동력 그리고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의 결합에 의해서 남북한과 러시아가 동반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23)</sup>

외교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의 태도는 매우 조심스럽다. 러시아는 통일한국의 위상, 특히 통일한국이 동북아에서 갖는 외교안보적 위상에 대해서

23) 러시아측은 이와 같은 3자 협력구도가 가능한 분야로 첫째, 연료 및 에너지 시스템 분야, 둘째,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아무르 지역과 하바로프스크 지역의 삼림개발, 셋째, 북한의 경공업 분야에 남한의 설비제공, 넷째, 북한의 원전건설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를 들고 있다. Gennady Levchenko,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Korea-Russia cooperation, The 7th IFANS-IMEMO conference, 1997.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남북한 합계 170여만명의 군대가 서로 자신들의 신변안전이 아닌 주변국가를 향해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특히 통일 한국이 여전히 미국주도의 블록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아시아판 NATO확대로 받아들일 것이며, 심지어 미국의 최신공격무기들이 러시아의 접경인 북한에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통일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일본의 우세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비 블록 중립국의 길을 걷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sup>24)</sup> 물론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sup>25)</sup>

이와 같은 점들을 기초로 최근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지향점들을 추구하고 있다.<sup>26)</sup> 우선 남북한 사이의 중재자로서, 한반도 현상유지(status quo)의 보장자 역할을 러시아가 수행함에 있어서 양자해결보다는 지역차원의 노력을 지향<sup>27)</sup>하며, 이와 같은 목표는 남북한에 대한 균형외교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24) Vadim Tkachenko, 한반도 정세 : 현황과 전망,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Korea-Russia cooperation, The 7th IFANS-IMEMO conference, 1997, 10. pp. 4-5.

25)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로 인해 군사적인 적대구도의 완화,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관계 발전가능성, 시베리아 가스관 건설사업 등 거대 국제사업들의 실현가능성 제고, 그리고 이 지역의 현존 세력관계간의 긴장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A Zhebin, Russia and Korean unification, Asian Perspective, Vol. 19, No. 2, Fall-Winter 1995, p. 187.

26) Valery Zaitsev,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 우선권의 변화,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Korea-Russia cooperation, The 7th IFANS-IMEMO conference, 1997, 10. p. 6.

27) 러시아는 1994년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한, 주변 4국, IAEA와 UN이 참여하는 8자회담을 주창했다. 또한 1995년에는 4자회담에 대한 대응으로 6자회담을 제안했으며, 97년 4월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참여하는 국경병력 감축협정 체결이후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러시아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열세인 동북아에서 다자 안보체제를 형성 러시아의 정치, 경제외교적 발언권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재남,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 변화와 남북한 관계", 「통일경제」, No. 8, 1997. p. 96.

로 경험확대라는 맥락에서 북한에 대한 정치적 역할을 구사할 수 있는 지렛대를 모색하는 한편 같은 맥락에서 평양과의 관계를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러시아의 균형외교 정책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함으로서 남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선택은 다자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 동안 배제되어 온 것은 러시아가 남북한에 대해서 균형있는 외교수단을 가지지 못했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의 주변부화의 진정한 이유는 러시아가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대화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북한 역시 러시아의 참여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문제에의 참여에 있어서 중국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으나 중국 역시 러시아의 진정한 지지자가 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sup>28)</sup>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목표와 현실간에는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은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태 및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관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sup>29)</sup> 비관적 시나리오는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실패했다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긍정적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자국의 정치, 경제적 참여를 보장해 주는 국제환경에 놓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러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상황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고립되는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유럽지역에서의 열세가 현저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중요성을 인지해나갈 것이다. 아태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특히 보수파들

28) Chikahito Harada, *Russia and north-east Asia*, *Adelphi Paper* 310, 1997. p. 69.

29) Valery Zaitsev,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우선권의 변화,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Korea-Russia cooperation, The 7th IFANS-IMEMO conference, 1997, 10. p. 6.

로부터 강하게 제기되어 온바 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정리하면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경제와 외교안보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동북아 외교정책의 주요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구축, 그리고 통일을 이룩해야하는 한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 러시아로부터 유리한 협력구도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국의 대 러시아 정책은 외교안보와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러시아는 경제개혁 초기에 지향했던 미국식 선진자본주의형태가 자국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의 성장모델에 큰 관심을 가져왔으며, 한국과의 경협에 상당한 중요성을 두어왔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합작 및 직접투자의 증대를 원하고 있으며, 교역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자신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군수산업분야와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이 중요한 시장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sup>30)</sup> 그동안 러시아가 보인 불만은 한국이 경협의 동반자로서 가치를 상실했다기 보다는 경제개혁의 실질적인 수행과정에서 지원과 경협이 의도했던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경협의 필요성은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남아있다. 러시아는 매우 중요한 잠재적 시장이라는 점 이외에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걸림돌로 등장하게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대러시아 경제교류와 협력은 보다 중장기적인 전략의 수립하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대로 러시아는 최근 대서양외교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아태지역에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러시아의 자세는 현실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사실상 과거와 같은 형태의 영향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기초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자신들이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관계에 있어서 배제되지 않고 '일

30) 군수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정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최근 러시아의 급속한 대중접근 일본과의 관계개선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실리추구과정에서 러시아의 불만을 무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의 실례로는 4자회담구도라는 한반도대화채널의 형성을 중심으로 하되 러시아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채널을 추진함으로써 러시아의 외교안보상의 불만을 무마하는 전략의 구사일 것이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을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대러시아 외교채널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러시아의 개혁과정에서 좌파계열과 민족주의세력은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엘친정부의 외교정책이 보수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아태관계에서 자기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잃은 것이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한반도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북한을 효율적인 카드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의 대 러시아외교는 주로 집권층인 엘친과 개혁세력에 집중되어있었으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향후 이와 같은 기존의 방식은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국내정치와 주요세력들인 좌파와 민족주의계열과도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러시아 국내정치와 보수화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피해를 완화할 것이며, 러시아의 대북정책구사에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sup>31)</sup>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방어적 입장에 있는 러시아의 아태정책상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역학구도 변화에 가장 적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며, 따라

3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가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는 강원식,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참조.

서 한반도 통일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자신들의 외교안보역량을 강화할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등장은 러시아의 경제상황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개발에 긍정적인 측면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기초해서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V. 맺음말

러시아의 대내외 정세와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남한과의 경험을 지속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지속이라는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국제적인 영향력감소에 따르는 위기의식의 증가와 민족주의세력과 좌파의 부각에 따라 최근 몇 년간과는 달리 북한에 대해서도 관계개선을 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독자적인 동북아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개선에서 직접적으로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현실이 놓여 있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은 러시아에 있어서 '카드'이상의 역할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의 불만을 완화하고 러시아를 한국의 건설적인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원하는 일정한 비용의 지불이 필요하다. 그것은 러시아 경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지원, 무역과 투자의 확대 등 경험을 확대하는 것과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외교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포함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는 미국의 중심적 헤게모니가 일정정도 관철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일본과도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일정정도 유동적인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은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에 중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 과정에서 한국과 통일과정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돼서는 안되며, 이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는 한국정부에게 다양한 차원에서 대 러시아 교섭력의 확대를 꾀해야 할 때라는 점을 주지시키는 것이다.